

'과학화 정부' 서두를 때다

글_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세계적인 석학들이 "21세기 과학기술은 그 영역을 뛰어 버리고 '퓨전'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BT나 NT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이를 감지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과학기술에 대한 독점적 우위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교육의 개혁을 위한 21세기 플랜을 세웠고, 유럽연합은 과학기술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창조적 기초과학분야에서 21세기의 세계적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양상도 정부·대학·공공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을 주체로 하는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역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효율성제고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WTO 규범이 경쟁 전단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그것이다.

언뜻 보기에,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고 발전한 것 같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 정책수립에서부터 체제의 완성이나 수준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기 만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학기술의 퓨전화와 맞물려, 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오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국방부로 확산되고 최근에는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도 국가 연구개발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제는 참여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과학기술인은 물론, 모든 국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과학

기술 행정은 과학기술이라는 학문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행정과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과학기술행정에는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행정의 직선적·관료적 사고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기술직 공무원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 정보화 사회를 주창하고 있는 요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국어사전은 "행정이란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부"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행정도 '법에 따라' 일반 행정 하듯이 다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과학기술 정책도 일반 행정 고시 출신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마인드가 필요한 국가정책결정의 왜곡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사업, 그리고 생명윤리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 과학기술체제는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단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미국가들처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부처에 기술차관제 도입 필요

현재 국가정책을 다루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직은 2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1급은 9.7%밖에 안 된다.

장·차관급 정무직에는 다섯 손가락도 필요 없을 정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약 3대 1이며,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는 175명을 채용하면서도 기술고시 합격자 채용은 44명에 불과했다.

우리가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의 공직참여 확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44쪽에 계속>